이재명, 충청서 88.15% 압승… 3위 김경수 "단일화 의미없다"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이재명 88.15% 1위… 김동연 7.54%·김경수 4.31%
"첫 경선지 투표율 57.87%… 지난 대선 대비 높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가 합산 88.15%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가 합산 88.15%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선 후보가 7.54%, 김경수 경선 후보가 합산 4.31%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6%,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87.32%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 7.53%·전국대의원 8.43%를, 김경수 후보는 권리당원 4.31%·전국대의원 4.25%를 각각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됐다. 충청 경선 권리당원·전국대의원 선거인단 총수는 11만1863명으로, 이 중 6만473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7.87%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57.62%(선거인단 11만131명 중 6만3460명)였고, 전국대의원 투표율은 73.33%(1732명 중 1270명 투표)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청 경선 투표율과 관련해 "제 기억에는 지난 대선 경선 투표율보다 높은 것 같다"며 "그만큼 우리 당원들의 정권교체, 정권창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당원들이 투표로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은 계속 영남·호남·수도권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충청권에 이어 오는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더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9일과 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5월 1일 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남은 기간 총력전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짐작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른 두 후보가 연정과 권력분담을 얘기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본선도 아니고 예선, 경선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앞으로 다른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단기필마로 후보·자원봉사자 위주로 매머드 선대위가 없이 출마·출전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 득표를 올려보자는 것 외에 특별한 목표는 없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대선 레이스 출발이 늦은 것에 비해 지금까지 차근차근 달려온 첫 번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진심과 비전을 당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른 대선 경쟁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경선은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경선의 최대 목표"라며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정 경험이나 비전·정책을 다시한번 국민들과 당원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1위를 기록,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계엄옹호당으로는 대선 필패…반탄·검사 출신 후보 안 돼"

"김문수·나경원·홍준표, '반탄' 입장 바꿔야"
"검사 2기 정권 안 돼…한동훈, 경험 더 쌓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20일 "계엄옹호당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반한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 검사 정권 연장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도 이길 수 없다"며 "저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독보적인 1위임에도 이미 대통령 행세 중"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는 패배주의가 난무한다.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기도 전에 외부 수혈을 외친다. 반탄(탄핵 반대)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후보로 분열하고 반목하며, 다시 탄핵의 바다와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위헌 위법 행위로 탄핵됐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대선 기간 내내 '계엄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 뿐이다. 이재명의 대선 전략인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 동조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심'과 '윤픽' 후보는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을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라며 "오로지 '반탄' 만 주장하는 후보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만약 이재명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며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는 '5년제 제왕 이재명'과 호가호위하는 '친명' 세력이 권력의 절대 반지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사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다'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대로면 우리는 이재명에게 진다. 당선 가능한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승리는 외연 확장에 있다.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긴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이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만날 수 없다"며 "저, 안철수 이재명을 제압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저 안철수가 이긴다"고 했다.

그는 앞서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던 김문수·나경원·홍준표 경선 후보 등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그렇다"며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나. 탄핵 결정에 승복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철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정훈 의원 "자치분권 강화·재정분권 실현해야"
중앙집권 권력구조 속 지방 자율성 미약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8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주권재민 가치를 실현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최영호)의 '국민 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국민주권전국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재정분권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약 50%에 불과하다"며 "중요 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회는 제한된 역할로 집행부 견제기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2004년 주민투표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는 등 시민 참여가 낮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역량과 경험의 격차도 존재한다"고 지방자치 분권의 사회적 측면을 분석했다.

신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지배적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제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광역 시도당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당의 윤리심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